

이명박 정부와 ‘8·15’ 기념일의 해석: 보수의 위기의식과 담론정치

하상복 | 목포대학교

| 논문요약 |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5일을 광복절만이 아니라 정부수립 60주년 기념일로 정립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한국 현대사에서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그와 같은 정치적 담론의 맥락과 동인 그리고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8·15 해석의 정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지속적으로 표출해 온 민족주의 및 민주주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보수 세력의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는 뉴라이트 운동을 통해 두 전임 정부의 역사해석과 정치적 실천에 도전해 왔으며,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수립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를 한층 더 견고하게 구축할 필요를 인식했다. 우리는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I. 두 연설, 두 개의 '8·15'

2007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를 낭독했다. 연설의 청중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녘동포와 7백만 해외동포 여러분”으로 호명되었다. 그리고 연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62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슴 벅찬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 경축사는 그럼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 하나가 있음을 환기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하나의 큰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아직 평화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경축사의 지배적인 논조는 남북 간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62년 전, 우리는 분단을 우리 힘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 협력하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노무현 2007).”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첫해의 광복절 경축사,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낭독했다. 축사의 청중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내외귀분 여러분!”이다. 그리고 연설은 아래와 같은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60년 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어서 이후의 경축사는 대한민국의 건국 60주년이 갖는 긍정적인 가치와 결과를 알리는 데 할애되고 있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대사 박물관’을 짓겠습니다.”; “건국 60년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당당히 싸워왔습니다(이명박 2008).”

경축사의 텍스트적 색깔 어느 것 하나 동일하지 않다. 위 두 경축사는 서로 조응하거나 화해할 수 없는 '역사 해석'의 대립구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다. 2007년 경축사에서 북녘동포는 광복과 해방의 기쁨을 기꺼이 함께 누려야 할 민족 구성원의 범주에 포함되었다가 다음 해에는 그 민족적 자격을 박탈당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월 15일을 제국주의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으로 의미화하고 그 해방 위에서 남과 북이 단일한 근대국가로 수립되는 정치적 과정을 이루지 못한 것을 민족적 비극과 고통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통일은 민족적 지상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와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5일을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보다는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수립된 날의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가 말하는 8·15는 1945년이 아니라 1948년이다. 더불어 그는 남북한이 각각 다른 정치체제를 수립해 별개의 국가로 존재하는 것을 민족적 슬픔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통일 민족주의들에서는 불완전과 결손을 의미하는—대한민국의 수립을 “성공”과 “발전”과 “기적”과 “자유”의 수호라는 정반대의 가치로 해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해방 이후부터 2008년 이전까지 8월 15일을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한 광복절로 기념해왔다. 그런 면에서 8월 15일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해석은 그 자체로 주목을 요한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그 이듬해로부터 201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8월 15일에 대한 그와 같은 해석은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오히려 정부는 2012년의 8월 15일에 대해서는 광복이라는 역사적 의미에 더 큰 강조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출범 첫해에 시도된 '일회적인' 언어정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고민하게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근대국가의 재현의 정치라는 일반론적인 관점과 한국 현대사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갈등이라는 특수성의 관점에서 동시에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관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모든 근대국가는 국가적 정체성과 정당성의 창출을 위해 국민들의 정치적 이성과 감성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와 같은 국가적 과제는 다양한 문화적·상징적 장치들을 매개로 하는 정치적 재현과정(representation)(Marin 2005)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감각적으로 구현하고 일상화하려는 기념일의 의례는

그러한 재현의 정치들 중의 하나다. 그런 점에서 기념일의 형식과 내용을 둘러싼 대립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곧 국가적 정체성과 정당성에 대한 인식에서 일정한 균열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8·15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미규정을 그와 같은 이론적 맥락에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새로운 정부 출범’이라는 시간적·상황적 국면 속에서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특수성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은 두 진보적 정부에 들어서면서 ‘남남갈등(김갑식 2007)’이라는 이념 대립의 정치를 경험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 대결은 남한의 국체와 정치에 대한 반(反) 보수주의적 해석이 정부의 공식적 관점으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한 보수주의 세력의 위기의식과 공격적 대응 속에서 조형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8월 15일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관점은 10년 동안 정치적 수세에 몰려 있던 한국의 보수가 권력을 잡자마자 도전 받았던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근대국가와 기념일의 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부터 우리의 문제에 접근해보기로 하자.

II. 근대국가와 기념일의 정치: 이론과 사례들

국가라는 정치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소속의식인 정체성과 그 토대 위에서 그들의 충성과 희생의 정당성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생존은 바로 그러한 정치적 심성 위에서만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 과제에 도달하기 위한 원리와 메커니즘에서 근대국가와 전 근대국가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전 근대국가, 특히 왕조국가에서 그와 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국가의 인격적 실체로서 군주의 존재와 위엄을 표상하는 것이다. 회화, 건축, 음악, 무용, 의상 등 다양한 예술적 장치들을 동원해 제한적인 피치자들을 대상으로 군주의 절대성과 예외성을 표현해온 동서양의 권력미학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하버마스는 이를 ‘과시적 공공성(하버마스 2001,

제1장) 으로 명명했다.

국민국가를 본질로 하는 근대국가의 정체성과 정당성 창출의 원리는 그와는 다르다. 근대국가는 근본적으로 인격적 실체성과 무관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피어슨 1997, 38-39). 근대국가는 비인격적 추상성의 토대 위에 구축된 체제다. 립셋(Lipset 2006)은 미국의 정치적 본성에 대해 “혁명을 통해 수립된 미국은 선한 사회의 본성에 관한 일련의 교의를 포함하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나라(33)”로 규정했다. 그 명제는 근대 국민국가의 본질을 말해준다. 근대국가는 관념적 가치들 위에 선 정치체라는 말이다. 근대국가가 지향하는 자유, 평등, 존엄, 권리, 주권 그리고 그 이념들의 총화로서 국민은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들이다. 그렇다면 근대국가는 그 가치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한 그 가치들을 체현하는 주권자로서 국민이 누구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인격체의 재현이 아니라 이념 혹은 가치의 재현이라는 과제로 다가온다. 근대국가의 문화정치와 상징정치는 그러한 정치적 필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국가보다 복잡하고 정교하며 광범위한 메커니즘을 요구한다. 그 메커니즘으로 우리는 신화 또는 역사 속의 인물들을 매개로 국가를 재현해내는 의인화(personification), 국가적 기억을 구현하는 문화재들을 전시하는 박물관, 애국주의가 극적으로 표출되는 국립묘지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근대국가는 그러한 재현의 정치로서 국가기념일을 발명했다. 국가기념일은 의례와 달력이라는 두 개의 하위 형식을 통해 구성되는데, 합창과 선서와 연설 등으로 구성되는 의례는 국가의 존재이유와 이념적 토대를 상기해주고 국가와 국민의 심리적 통합을 유인한다. 그리고 미디어의 매개로 의례의 정치미학은 보다 더 광범위한 정치적 효과를 향해 나아간다. 또한 국가기념일의 특정한 명칭을 담고 있는 달력은 국민들이 국가이념을 환기할 것을 일상적으로 요청한다(체류 바벨 2006, 365). 그렇게 보면 기념일은 일상성, 규칙성,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국가이념의 국민적 전파와 정당성의 창출에 작용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재현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이념과 가치를 재현하고 유포하는 다른 장치물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기념일 또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이유를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몇 가지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국가기념일의 정치에 접근해보기로 하자. 프랑

스의 혁명 기념일인 ‘7월 14일(le Quatorze Juillet)’을 살펴보자. 1880년 제3공화정에서 제정되어 지금까지 프랑스 공화국의 가장 성대한 국가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는 7월 14일이지만 정파들 사이에서 복잡한 논쟁의 국면을 거쳐야 했다. 3공화정은 프랑스대혁명의 이념적 상속자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치적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모순되는 정치적 계기들이 섞이면서 전개된 프랑스대혁명의 시간들 중 어떤 날을 택해야 하는가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며 모순적(최갑수 2006, 18)”인 프랑스대혁명의 정치적 시간들, 예컨대 대혁명이 발발한 1789년, 자유주의적 헌법이 제정된 1791년, 또는 인민민주주의에 입각한 제1공화정이 수립된 1792년 중에서 어느 해가 공화국의 기념일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혁명의 주요한 날들을 포함하게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1789년 5월 5일(삼부회 개최일), 6월 20일(테니스코트 선서일), 7월 14일(바스티유 감옥 함락일), 8월 4일(봉건적 특권 포기 선언일), 1790년 7월 14일(대연맹제 개최일), 1792년 9월 20일(제1공화정 수립일), 1793년 1월 21일(루이16세 처형일), 1794년 테르미도르 9일(테르미도르 쿠데타 발발일) 등, 그날들 사이에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이념적 편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이 없는 날들이 제외되고 결국 7월 14일과 8월 4일이 남았다. 온건 공화파는 타협에 의해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8월 4일을 선호했지만 급진파는 “1789년 7월 14일의 귀결적인 사건”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동의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7월 14일이 공화국의 기념일로 결정되었다. 바스티유 감옥 함락일이 혁명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궁극적 준거로 수용되었다. 중세 이후 프랑스의 모든 구체제와 구질서가 인민의 힘에 의해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와 질서가 시작된 날의 의미로 정립되었다(Amalvi 1984, 424-426).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매해 5월 마지막 월요일에 거행하는 전몰용사 추모일)’ 또한 국민적 추모일로 정립되기까지 오랜 정치적 대립의 시간을 지나야 했다.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연방정부는 전몰용사들을 위해 데코레이션 데이(Decoration day)로 불린 추모일을 제정했다. 급진 공화파 로건(John Logan) 의원의 제안으로 1868년 5월 5일 제정되었다. 그런데 데코레이션 데이가 추모할 전몰용사들은 내전의 모든 전사자가 아니라 연방주의를 수호하다 전사한 북군 병사들로 제한되었다.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었던 남부의 전몰자들은 국가적 추

모의 대상도 될 수 없었다. 데코레이션 데이에서 배제된 남부는 지역마다 다른 추모일을 제정해 전몰병사들을 추모하다가¹⁾ 1916년, 연방탈퇴 후 선포한 남부연합국 대통령 데이비스(Jefferson Davis)의 생일인 6월 3일을 공식 추모일로 정했다. 전몰용사들을 위한 추모일의 차이는 남부와 북부가 이념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화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거리가 좁혀지고 궁극적으로 해소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했다. 미국-스페인 전쟁 승리를 국가적 통합의 계기로 이용하려 했던 맥킨리(W. McKinley) 대통령의 시도에서부터 애국심을 불러일으킨 몇 차례 전쟁의 시간들을 지나야 했다.

한국에서 순국선열의 날도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1997년 4월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널리 전해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 정부의 결정은 외견상 순국선열유족회를 중심으로 1988년부터 10여 년 동안 전개된 순국선열을 위한 국가기념일 제정운동(지영임 2008, 603)을 수용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노태우 정부가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순국선열의 날 제정 요구를 문민정부가 받아들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충일이 전몰군경만이 아니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기념일을 제정하지 않아도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희생된 인물들을 기리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있었다. 현충일은 전몰군인의 추모라는 이념적 정향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군인이 아닌 애국적 인물들은 불가피하게 주변적 의미만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순국선열이 중심이 되는 또 하나의 추모일이 필요한데, 정부는 그 날을 11월 17일로 제정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대국가는 이념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 성립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정치적 차이와 대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위의 세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본 국가적 기념일의 제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곧 근대국가의 그와 같은 본질적 측면을 말해준다.

1) 예컨대, 남부의 존스톤(Joseph E. Johnston) 장군이 연방군의 셔먼(William T. Sherman) 장군에게 항복한 날인 4월 26일을 추모의 날로 택한 주가 있었다면,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5월 10일, 즉 로버트 리 장군과 함께 남부군을 이끈 잭슨(Stonewall Jackson) 장군의 사망일을 추모의 날로 정했다(Bright 2001, 77).

첫째, 프랑스 제3공화정이 혁명의 이념적 근원을 갖는다고 할 때, 각 정파들이 생각하는 그 이념적 근원은 7월 14일이라는 정치적 최대 공약수를 찾아갈 때까지 각각 달랐고 대립했다. 그 지점에는 혁명의 발발, 혁명과 반혁명의 순환, 내전과 같은 프랑스 근대국가 탄생의 역사적 특수성이 투영되고 있었다.

둘째, 1860년대 미국연방에서 가장 긴급하게 정리해야 할 사안은 무엇보다 죽은 자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내전으로 너무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것을 방임하는 일은 정치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위협하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메모리얼 데이인데, 문제는 그 추모의 대상이 이데올로기적 당파성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시 미국연방의 정치적 모순과 불균형을 투영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전쟁에서 패배한 남부는 역사와 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어떠한 권리도 소유하지 못했으며, 그들은 실질적으로 비국민, 비주체로 남아 있어야 했던 것이다.

셋째, 한국사회는 분단, 전쟁, 군부통치와 권위주의로 이어지는 정치적 국면들을 통과해가면서 근대성을 구축해 나갔는데 민주화는 그러한 과정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냈다. 그 새로운 경로의 시작은 문민정부에 의해 군부의 탈정치화를 실현하고 민간인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는 일로 나타났다. 군부가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애국적 영웅의 핵심적 범주는 반공주의적 군경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현충일은 그러한 이념적 방향이 구현된 기념일이었다. 민주화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문민정부는 군경과 대비되는 애국적 영웅들을 주체로 정립하기 위해 새로운 기념일을 제정하고자 했다. 그 점에서 순국선열의 날은 군부통치와 문민민주주의라는 두 이질적 개념이 적대해야 했던 한국적 특수성을 보여준다.

8·15 기념일을 광복의 의미보다는 대한민국의 탄생을 자축하고 기념하는 국민적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의지 또한 한국현대사가 노정하고 있는 정치적 모순과 대립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 속에는 대한민국을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분단과 결손국가로 규정해야 하는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이북의 적대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현한 온전한 독립국가로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깔려 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 비추어,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념일로 8월 15일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도출된다. 이명박 정부의 그와 같은 기념

일 기획은 민족주의와 진보주의를 지향하는 두 정부²⁾의 등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III.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의 등장과 현대사 인식의 갈등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10년은 초유의 이념대결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두 정부의 이념적 지향과 정치적 실천은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전면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해방 이후 형성된 한국의 지배 블록과 양립하거나 화해할 수 없는 존재론적 기반을 가진 정부들이었다는 점이 문제의 궁극적 본질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두 정부가 추진한 개혁의 방향과 결과들에 기인한 것이었다. 주지하는 것처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정치적 정의와 민족주의 위에서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심판하며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평화구축과 교류확대에 온 에너지를 쏟았다.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민족주의에 입각해 남북한의 평화정착과 화해와 협력에 매진할 것을 선언했다.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과 불가침, 이

2) 우리는 그 두 정부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포함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 1993년에 집권한 김영삼 문민정부의 역사적·정치적 위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는 것처럼, 문민정부는 취임사를 통해 민족주의적 가치를 표방했고, 정치·사회·경제 부문에서 다양한 개혁을 통해 진보적 역사의식과 정책적 지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김영삼 정부를 이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김영삼 정부의 역사적·정치적 행보가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위기의식 표출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점이다. 그 점은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하는데 첫째는 문민정부가 본질적으로 보수 세력과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탄생했다는 점이며, 둘째는 집권 초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민족주의와 진보주의적 지향에서 상당 부분 이탈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김영삼 정부는 한국 보수 세력의 정치적 위기의식 형성의 전 단계를 제공했을 수는 있지만 두 후임 정부에 대한 보수 세력의 위기의식이 보인 규모와 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미 남북한 당국 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남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에의 대로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김대중 1998).” 돌이켜볼 때, 남북의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집권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취임사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2000년의 ‘6·15 남북정상회담’은 정치적 사태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인식을 유도했다. 분단 이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니 상상해서는 안 되었던 역사적 이벤트는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민족주의적 열정이 남한 사회에 조성되는 것을 촉진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그러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지속해나갔다.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의 연속선상에서 평화정착과 통일을 추진할 것임을 취임연설을 통해 밝혔다. “이제까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성과는 괄목할 만합니다. [...] 저는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방식은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노무현 2003).” 그리고 그 공약은 이후 민족적 화해 정책과 2007년 10월의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다.

남남갈등은 그렇듯 급격하게 전환되는 남북관계 속에서 촉발되었다.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북한 인식은 민족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들은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대북 포용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정상회담 자체에 비판적이었다. 남한과 이념적으로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호전적인 적대 세력으로 북한을 간주해온 그들의 입장에서 정상회담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김갑식 2007, 40). 그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대 북한 원조는 평화가 아니라 긴장과 분쟁의 가능성만을 높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005년의 두 상징투쟁은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결집,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균열과 정치적 대결을 가속화했다. 2005년 5월, 재야원로 20여 명이 맥아더 동상 앞에서 동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제헌절을 맞아 진보와 보수 단체들이 각각 동상 앞의 집회를 주도함으로써 남남갈등의 막이 올랐다. 국민의 정부에서 발흥한 통일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맥아더로 상징되는 미국은 분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였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념적 경계로 건설된 국가정체성을 지지하는 세력의 눈으로 볼 때 미국은 나라의 생존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준 절대적 우방이었다. 동상

앞에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이념 대결은 같은 해 8월에 재현되었다. 해방 60주년을 맞는 해를 기념해 남과 북은 민족대축전 개최에 합의했는데, 그 행사에는 북한 대표단의 서울 국립현충원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충원을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의 전몰군경 추모, 즉 '반공주의'의 공간으로 간주하는 보수우익의 입장에서 그 의례는 받아들이기 힘든 아이러니였다. 민족적 화해라는 대의에 입각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정부와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에 맞서 보수우익단체들은 현충원에 모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찢고 월담을 시도하는 등 자극적인 반복시위를 벌였다(세계일보 05/08/20).

남남갈등의 진원지는 북한-미국을 둘러싼 해석의 축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전임 정부,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한 과거사 청산 작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정의의 구현을 강조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노무현 2003).” 그는 그러한 정치적 의지가 결코 수사가 아님을 오래지 않아 증명해 보였다. 대통령은 2004년 10월 31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도민 4백 명과 함께 한 오찬간담회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노무현 2005, 256).”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일제 부역의 역사 규명에서 본격화되었다. 2004년 3월 2일, ‘일제 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은 5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 역사 청산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게는 애국선열에 대한 존경만큼이나 얼굴을 들기 어려운 부끄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광복 예순 둘을 앞둔 지금도 친일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고, 역사의 진실마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국선열들이 하나뿐인 목숨을 내놓고 투쟁했던 그 시간에 민족을 배반하고 식민통치를 앞장서 대변했던 친일행위가 여전히 역사의 뒀안길에 묻혀 있습니다. [...] 우리는 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상이라도 명확히 밝혀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노무현 2005, 257).” 이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통과된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친일 조사 대상자의 범위가 중좌(중령)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군 중위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서울신문 04/12/30).

참여정부는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또 하나의 과업을 실천에 옮겼다. 2005년 5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제정되었다.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제1조 목적)” 제정된 과거사법을 근거로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인권유린, 폭력, 가혹행위를 초래한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사위가 조사하고 재심 또는 보상 권고를 내린 사건들 중에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1961)’, ‘이수근 간첩 사건(1967)’ 등 박정희 집권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반인권적 국가폭력 사건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한국일보 07/01/31).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정통성과 정당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이념갈등을 벌였다. 불완전한 민족국가 대 완결된 국민국가, 반미 대 친미, 친일 부역의 반민족성 대 불가피성, 민주화 대 산업화와 같은 논쟁의 범주들을 언급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진보는 전자를 지지했다. 즉 남한과 북한을 통일이 라는 민족적 과제를 이룩하지 못한 결손국가로 보고, 미국을 한국의 분단과 민주화의 지연에 책임 있는 나라로 간주하고, 일제하 부역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산업화를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보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979년에 발간되기 시작해 1980년대 대학가에 확산된 『해방 전후사의 인식』 시리즈는 아마도 그러한 민족주의 역사인식을 대중적 차원에서 체계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1980년대 정치사회운동에서 지배적인 흐름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의 보수우익은 그러한 민족주의와 진보주의 운동에 맞섰지만, 진보에 맞서기 위해 자신들의 운동 이념을 개발하거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권위주의 정권들이 물리력과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그 역할을 대신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등장하고 이어서 2003년 전임 정부의 이념과 가치를 계승하는 참여정부가 등장하면서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보수우익은 정치세력화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른바 '뉴라이트 운동'이 그것이다. 한국의 보수우익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민족주의와 진보주의 이념노선에 전면적인 반대와 저항의 입장을 견지했다.

근대국가 건설 이래 한국의 보수가 지지해 온 정치적 입장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에게는 냉전과 열전(한국전쟁)의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지키는 과제가 주어졌고, 박정희에게는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제가 주어졌으며, 민주화의 과제는 그 이후 세대의 몫이 된다(박찬표 2008, 62).” 그런 점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대단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4·3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는 곧 이승만 정권에 대한 도덕적 단죄이며, 친일 부역 규명에 박정희를 포함한 것은 그가 이룩한 산업화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을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화해를 추진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한 적대국을 온존시키는 이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우익은 자신들이 굳건히 지켜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건설과 산업화의 정당성이 반대세력에 의해 현실적인 위협에 놓이는 상황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들어 이념과 질서의 위기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과거의 권위주의적 집권 보수 세력은 분단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진보’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배경으로 대북관계, 대미관계, 언론정책, 복지정책,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의 분야에서 개혁정책을 전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보수 세력의 정치적 상실감과 위기의식은 고조되었다(강정인 2008, 168).” 우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우익운동의 양상을 그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쇄신’과 ‘자기반성’의 시기를 ‘통과해’ 뉴라이트로 거듭난 한국의 보수우익은 더 이상 조직력에 기반을 두는 물리력 행사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중적 역사교육과 이념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 기반을 확장하고자 한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진보와 좌파들의 전유물이었던 지식을 매개로 한 이념투쟁의 재 전유(re-appropriation)를 지향하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근본적인 수정을 피하기 위해 2005년 1월에 창립된 ‘교과서 포럼’이라는 지식 네트워크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구축한 한국 현대사의 역사 인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 해석의 프레임을 제공하기 위해 발간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2』(2004)를 들 수 있다. 대중과 지식을 매개로 새로운 역사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뉴라이트의 새로운 이념투쟁 방식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을 계기로 더 큰 규모와 강도로 실천될 준비에 착수했다. 집권 첫해에 정부가 제기한 ‘8·15=건국절’ 담론과 건국절 만들기의 정치는 그러한 정치적 의지의 구체적인 발현이었다.

IV. ‘건국절’ 만들기의 정치

2006년 7월 31일자 <동아일보>에는 이영훈(서울대 경제학)의 칼럼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가 실렸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빛은 1948년 8월 15일의 건국 그 날에 찾아왔다. 우리도 그 날에 국민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는 건국절을 만들자. [...] 내후년이면 대한민국이 새 갑자를 맞는다. 그 해에 들어서는 새 정부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60년 건국사를 존중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면 좋겠다. 그때부터 지난 60년간의 ‘광복절’을 미래지향적인

‘건국절’로 바꾸자. [...] 누가 이 나라를 잘못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가. 누가 이 자랑스러운 건국사를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이라고 하는가(이영훈 2006).” 이어서 한나라당 정갑순 의원이 이듬해 가을,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1948년 8월 15일, 즉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의미가 축소되고 있음을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노컷뉴스 07/09/28).

건국절 제정 운동을 위한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추동력은 정부로부터 만들어졌다. 정부는 2008년 4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건국 6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방대한 규모로 전개될, 건국절 제정을 위한 대국민운동을 준비해나갔다. 2008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회의내용을 모은 ‘건국 6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안)’은 사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14호)을 근거로 조직된 기획단은 ‘기념사업위원회’, ‘조정위원회’, ‘추진기획단’³⁾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기념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주제를 선정, 기념행사, 학술문화연구, 국민 참여축제 등 복합적 기념사업”을 개최하고, “일반 국민, 민간단체,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대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입체적인 기념행사 추진”하고, “폭넓은 해외 홍보 및 해외동포의 참여로 건국 60년의 상징성을 국제적으로 전파(건국 6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2008, 5)” 하는 임무를 담당했



3) 세 조직은 공히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수립 60주년을 강조하고 60년을 발전과 성공의 역사로 평가하면서 건국절의 인식론적 토대를 공식화했다. 앞의 엠블럼은 대통령을 포함해 한국의 보수가 생각하는 건국절의 의미와 방향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민족주의의 역사인식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분단국가이다. “국가는 영속성을 기본 전제로 한다. 현재 남과 북은 그러한 면도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으나, 언젠가 하나의 국가 = 민족국가를 가졌을 때 비로소 영속성이 갖춰진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한국인처럼 우리는 1민족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민족도 드물다. 따라서 현재 남과 북은 2민족 2국가적인 면도 있지만, 한국인의 의식에 맞춰서 판단한다면, 불완전한 또는 특수한 형태의 1민족 2국가체제로서 1민족 1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중석 2005, 75).” 여기서 통일은 대체로 역사성과 종족주의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가 주장하는 건국절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국가는 통일국가가 아니라 미완성의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보수우익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명희(한국현대사학회 교과서위원장)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사를 누구의 시점에서 서술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한민족’의 시각에서 역사를 서술한 지금의 교과서는 문제가 있다.” 그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체성은 역사, 혈연, 언어와 같은 문화민족주의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는 국가이념에서 서로 화해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원리로 하고 있는 국가이며, 1948년 이래 ‘60년’ 동안의 모든 통치는 그 체제 수호를 위한 과정이었다. 바로 그러한 이념적 경계 위에서 산업화를 비롯한 국가발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결손국가가 아니라 완결된 국가이며 불행한 나라가 아니라 이념적 적(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룩한 위대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실패한 국가, 북한의 부자세습 왕조와의 정통성 비교에서는 민주주의, 민족주의, 인권, 복지, 건강, 소득, 산업 고도화, 휴머니즘, 그 어느 기준으로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성공했습니다(김진현 2008, vi).” 건국절 속에는

대한민국의 이념적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보수우익의 관념이 깔려 있고, 바로 그 이념적 경계 안에서 국민의식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른 정치체제인 남북한의 두 국가를 통일하자는 민족 담론이 세를 떨치고 있음은 사실상 자기를 키워준 국민국가를 부정하고 있음과 다를 바 없지요. 그 점은 다른 어떤 비슷한 예를 찾기 힘든 우리의 슬픈 역사이자 현실입니다(박지향 외 2004, 672).”

근대국가에서 국가이념과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단일의 정치적 주체로서 국민을 만드는 일은 종교적으로 국가적 충성과 자기희생의 덕성을 창출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근대국가가 조형하는 애국적 인물의 표상체계를 인식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자기희생을 실천한 인물들을 추모하는 현충일과 메모리얼 데이 속에는 애국의 표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프랑스 제3공화정이 공화정의 이념적 뿌리와 정체성의 기반을 만드는 상징과정에서 당통을 포함하면서 로베스피에르를 배제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읽을 수 있다(마생 2005, 29). 그러한 맥락에서 정치권력은 언제나 국가이념과 정체성과 애국을 재현해주는 상징물을 만들어 내거나 바꾸려 한다. 건국절 제정의 정치를 주도한 세력은 새로운 국가이념의 토대와 정체성의 외적 경계를 응축하고 있는 애국적 인물을 주조하고자 하는데, 그가 바로 이승만이다.

애국의 표상으로서 이승만을 만드는 일은 2011년 8월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주도로 실천되었다. 이승만의 애국적 영웅화 작업은 물론 그 시점에서 시작된 일은 아니다. 그것은 적어도 1990년대 중반부터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그 움직임이 보여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11년의 동상 제막의 의미와 위상은 사뭇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의 동상 건립은 정치적 위기를 인식한 보수 세력이 뉴라이트로 명명되는 저항적 집단으로 결집한 뒤, 국가권력의 장악을 통해 조성한 유리한 정치적 국면에서 산출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1990년대 중반의 상황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8월 25일, 장충동의 한국자유총연맹 광장에서 이승만 대통령 동상 제막식이 개최되었다. 박창달 자유총연맹 총재는 기념사를 통해 이승만에 대한 진보주의의 관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승만 박사는 민족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만들고,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

켜내었으며,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초석을 다지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역사적 업적을 폄하하고 음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일(한국자유총연맹 2011)"이다. 진보주의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그는 친일 부역자 청산을 고의로 방해하고 민족적 분단에 책임이 있으며, 민주주의 형성에 역행하는 권위주의 독재의 문을 연 인물이었다. '91세의 긴 생애를 산 이승만도 역사적 기준에서 본다면 결국 '분단과 통일' 그 어느 편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를 따져야 할 것이며, 그 밖의 다양한 평가는 민족사적 의미와는 별개의 것이 될 것이다. 한반도 남쪽에서 오늘 이 시대의 기본 성격의 양면 가운데 한 면인 분단을 만든 가장 결정적 계기는 이승만과 그 지지자들이 정치적 지배력을 확립한 것이다(김도현 2011, 361)."

분단, 친일, 독재와 같은 상징 언어들로 채워진 이승만이 되어서는 그의 정치적 주도로 건설된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적 심성을 생산해내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를 건국과 자유 수호를 위해 온 몸을 바친 '국부'로 재구성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정치적 과제가 자유총연맹 광장의 동상에서 시각적으로 구현되었지만, 그에 필요한 지적 토대는 지식인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이념적 안티테제인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편집자들의 대답에는 이승만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김일영은 이승만을 반민주주의적 독재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독재도 하고 부정부패도 했죠. 국민방위군 사건 같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걸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잣대는 그 잣대로 놔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중요한 잣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오직 하나의 잣대로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 독재를 했나 민주를 했나, 또는 통일이 라는 잣대로만 보니까 무리를 범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박지향 외 2004, 674)." 대답에 참여한 이영훈은 1950년대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이승만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흔히 혼돈, 무질서, 무계획, 방임의 1950년대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측면에서는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 이승만 정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라 만들기의 큰 원칙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시대라고

평가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런 장기적이고 지그재그적인 역사에서 1950년대는 그 시대 나름의 역할을 갖고 있었고 이승만 정부는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입대체공업화를 추진했고, 정치·군사적으로는 한미방위조약이라는 최대의 성과를 얻어냈죠. 그 토대 위에서 1960년 이후가 건설되었다고 생각합니다(박지향 외 2004, 676-677).” 나아가 김철은 민족주의와 민주화의 관점에서 이승만에 대한 정치윤리학적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을 향해 역으로 그들의 도덕적 자격을 문제삼는다.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잣대, 숭고한 목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정말 숭고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걸 하느냐는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박지향 외 2004, 674).” 박지향은 정치적 차원에서 1950년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는 민주주의 교육과 선거의 학습이 1950년대의 가장 큰 효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박지향 외 2004, 677).”; “한데 우정은, 차상철, 김일영 교수의 글들을 읽어보면 이 박사가 마키아벨리적인 뛰어난 감각을 지닌 정치인이었고, 나름대로 1950년대에 그런 정치인이 있었기에 한국이 그나마 발전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김구 같은 분에게 맡겼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웃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봅니다(박지향 외 2004, 673).”

여기서 우리는 박지향의 마지막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애국적 표상을 만들기 위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비애국적 표상을 대비시키는 방식인데, 김구는 당시 대한민국의 수립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고 북한과의 통일국가 건설에 매진한, 비애국적 인물로 등장하게 된다. 건국절의 제정은 곧 이승만의 애국적 영웅화로 연결됨과 동시에 그 반대편에 자리하고 있는 김구와 같은 인물들이 정반대의 의미체로 규정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V. 글을 맺으며

국가를 재현할 인격적 원리를 상실한 근대국가에서 상징은 국가적 이념의 경계와 정당성의 토대와 국가를 위한 충성과 희생의 근거를 가장 명확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일상적 집단기억으로 투영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근대국가에서 기념일의 정치에 대한 열망을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대혁명 이후 프랑스를 상징하는 알레고리로 정착한 마리안느(Marianne)의 탄생과 진화의 역사를 탐구한 아귈롱(M. Agulhon)의 명제를 살펴볼 수 있다. “국가의 형태와 그 원칙을 바꾸는 일은 곧 그것의 상징을 없애고 다른 상징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각상 하나를 부수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자연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열정도 빈 공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투쟁의 한 가운데에서 항상 수단이자 동시에 결과였다(아귈롱 2001, 387-388).” 우리는 아귈롱의 명제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개된 기념일의 정치에서도 재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현대정치사에서 바라볼 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현대사 해석과 정치적 실천 과정에서 눈에 띄는 단절을 보여 왔다. 철저한 민족주의적 이념에 입각해 남과 북의 문제를 통일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실천했으며,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권력 블록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그 역사적·정치적 정당성에 도전했다. 해방과 정부 수립 이후 단 차례도 국가권력에서 멀어져 본 적이 없는 한국의 보수는 그 두 민족주의 정권의 등장으로 참기 힘든 위기의식을 느껴야 했고 자신들의 권력이 관철되어 온 대한민국이란 정치체의 탄생과 존재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정당화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보수와 진보, 반공주의와 민족주의의 대 투쟁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위기 돌파를 위해 뉴라이트로 집결해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지식투쟁, 담론투쟁을 전개해 나간 한국의 보수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한층 더 공격적인 정치기획을 만날 수 있었다. 2008년 8·15 경축사에서 표명된 대통령의 메시지와 그 이전에 정부 주도로 추진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말한다. 한국의 보

수는 그와 같은 재현의 정치를 통해 두 전임 정부의 이념적 지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고자 했다.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국토통일을 이룩함으로써만 온전한 국가와 정치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역사인식, 대한민국의 건립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거스르는 과정이었고, 대외 의존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적 주체들로 인해 왜곡된 체제가 주조되었다는 정치인식이 근본적인 오류임을 말해주려 했다. 8·15 기념일은 그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의 제1공화국의 수립일이 8월 15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한국의 보수는 이승만을 국가적 영웅으로 만드는 담론과 미학 작업을 시도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와 한국의 보수가 건국절 제정을 향한 정치적 의지와 열정을 반복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워 보인다. 지난 2008년의 정치적 시도가 무색해 보일 정도다. 그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8·15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상징정치 혹은 언어정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등장이라는 특정한 정치적 국면 속에서 초래된 국가정체성의 위기의식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스펙터클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이명박 정부와 보수 세력이 2008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건국절 제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을 전개하지 않은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들이 그 사안을 역사학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학적 차원으로 접근하고자 했음을 말해준다. 앞서 말한 '스펙터클'의 의미는 그 맥락에 잇닿아 있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 세력의 관심은 2008년의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두 전임 정부와의 이념적 단절을 가시화함으로써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이지, 엄격하고 치밀한 역사적 정통성 논쟁을 본격화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뜻한다. 집권 1년차는 그러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절한 상징적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한국의 보수 세력은 그런 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이 도전받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역사해석의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 동원을 통한 정치적 스펙터클 만들기는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이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 속에서만 등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정인. 2008. “개혁적 민주정부 출범 이후(1998-) 한국의 보수주의: 보수주의의 자기쇄신?” 『보수주의와 한국정치: 무엇을 보수할 것인가?』. 한국정치사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9월 20일).
- 건국 60년 추진기획단. 2008. “건국 6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안).”
- 김갑식. 2007.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23(2).
- 김대중. 1998. “제15대 대통령 취임사”(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 자료).
- 김도현. 2011. “이승만 노선의 재검토.” 『해방 전후사의 인식 1』. 서울: 한길사.
- 김진현. 2008. “축사.” 『대한민국 건국 60년, 과거·현재·미래』.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 학술회의(7월 11일).
- 노무현. 2003. “제16대 대통령 취임사”(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 자료).
- _____. 2005. “제주 4·3 사건 관련 말씀.”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 _____. 2007.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사”(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 자료).
- 립셋, 세이무어 마틴. 문지영 외 옮김. 2006. 『미국 예외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마생, 장. 양희영 옮김. 2005.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서울: 교양인.
- 박지향·김 철·김일영·이영훈. 2004. “제9부 대담.” 박지향·김 철·김일영·이영훈 엮음.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 서울: 책세상.
- 박찬표. 2008. “건국, 48년 체제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 60년, 과거·현재·미래』.
- 서중석. 2005(2004). 『배반당한 한국 민족주의』.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아겔롱, 모리스. 전수연 옮김, 2001. 『마리안느의 투쟁』. 서울: 한길사.
- 이명박. 2008.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청와대 홈페이지 자료).
- 이영훈. 2006.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동아일보』, 2006/07/31.
- 지영임. 2003. “현충일의 창출과정.” 『비교민속학』 제25집.
- 체롭바벨, 에비아타. 2006. “달력과 역사: 국가 기억의 사회적 조직화에 관한 비교 연구.” 제프리 K. 올릭 엮음. 최호근·민유기 등 역. 『국가와 기억: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본 집단기억의 연속·갈등·변화』.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최갑수. 2005. “혁명의 로베스피에르, 로베스피에르의 혁명.”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 피어슨, 크리스토퍼. 박형신·이택면 옮김. 1997. 『근대국가의 이해』. 서울: 일신사.

하버마스, 위르겐. 한승완 역.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한국자유총연맹. 2011.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동상 제막식 보도자료.” 〈한국자유총연맹〉 홈페이지(www.koreaff.or.kr).

Amalvi, Chriatian, 1984. “Le 14-Juillet: Du Dies irae à Jour de fête.” Pierre Nora(sous la dir.). *Les Lieux de Mémoire, I. La République*. Paris: Gallimard.

Bright, David W. 2001. *Race and Reunion: The Civil War in American Memory*.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Marin, Louis. 2005. *Politiques de la Représentation*. Paris: Editions KIME.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경향신문』, 2011/08/26.

『노컷뉴스』, 2007/09/28.

『서울신문』, 2004/12/30.

『세계일보』, 2005/08/20.

『한국일보』, 2007/01/31.

투고일: 2012.08.20	심사일: 2012.10.09	게재확정일: 2012.10.12
-----------------	-----------------	-------------------

【ABSTRACT】

Lee Myung-bak's Government and Interpretation of '8·15' National Ceremony: The Conservative's Consciousness of Crisis and The Discursive Politics

Ha, Sang Bok | Mokpo University

In national ceremony of 'August 15,' President Lee Myung-bak has shown an exceptional political stance. He has told that the day has meant 60th anniversary of establishment of South Korean government. The reason of its exceptionality is that every political regimes before Lee's have always regarded it as independence day from Japanese imperialism. This article is oriented to analyze the political background, motive and effect of presidential message unprecedented in the South Korean modern history. The political equation, "August 15=60th anniversary of establishment of South Korean government" reflects, in fact, the crisis consciousness in which the South Korean conservatives had to be placed, due to the two precedent nationalist and progressive regimes. With New Right socio-political movement, South Korean conservatives opposed to the nationalist and progressive philosophy and policy. Lee's government, as much as conservative, has, without delay, responded to their political anxiety. It is in this political context that we can explain why in his beginning, the president has stated that August 15 must be national holiday celebrating establishment of South Korean government.

Key Words | August 15, Independence day, Governmental establishment day, Lee's political regime, New Right